

제민일보

HOME > 정치 > 정치종합

지지부진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 탄력 기대

✎ 윤주형 기자 | ⌚ 승인 2020.10.05 15:08



제주해군기지

토지 매입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사업 추진 등 위한 기금 조성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6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업 토지 매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강정마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설치, 재원 조성, 기금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의 30% 범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강정마을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안을 확정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모두 39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 등 총 예산 9625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강정마을 소유의 부지가 사실상 없고, 개별 사업 예산에 부지 매입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강정마을 지역 발전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사업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39개 사업 가운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9개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